

“지역 미래가 내 한표로 결정... 공약 살피고 투표합시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광주 AI 특화·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통 약속
이재명, 광주 군공항 국가 주도 이전·전남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등
김문수, 복합 소포물 교통 확충, 교육·창업 도시 구현...흑산공항 완성 등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지역민들의 관심은 광주·전남의 미래에 대해 내놓은 지역 대표 공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 발전에 대선 공약 수용과 이행에 달렸다. 여기서, 지역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자들의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선 공약을 살펴본다.

◇인공지능·군공항 이전·메가시티 조성 등=광주지역 대선공약은 크게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군공항 국가 주도 이전,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골자다.

모든 후보들은 5·18정신에 대한 헌법전문수락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주시 7개 핵심공약과 5개 지자체별 32개 공약’으로 지역민의 관심을 끌고 들었고,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도 3개 광주시 공약과 5개 지자체별 공약으로 맞붙었다.

이 후보는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명시했다. 광주공항 국가주도 이전에 대해 ‘국가의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 하의 갈등 조정’, ‘무안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의 3원칙을 못박았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도시 3.0시대 추진 ▲영산강 광주권 수변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의 사업도 이 후보의 공약에 담겼다.

각 지자체별로는 문화예술 자유의 정원(H·파크) 광주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동구), 마북동 탄약고 부지에 국제문화·교육지구와 친환경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서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사업(남구), ‘국립 모빌리티 파크’ 조성(북구) 도시철도 2호선 4구간과 연계한 광주송정역세권(경제 문화 복합 허브) 조성(광산구) 등이 핵심공약으로 반영됐다.

김 후보도 광주시의 핵심 미래 사업인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복합소포물 예정지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광주 특화 교육·창업 실증도시 구현도 공약에 실었다.

자자책 별 공약으로는 무등산케이블카 설치(동구), 군공항 이전 신속추진(서구), 봉선터널확장으로 교통난 해소(남구), 옛 광주교도소터 민주인권평화공원 조성 추진(북구), 광주금호타이어 이전 적극추진(광산구)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광주를 방문해 자율주행특구 조성을 약속하고, 달빛고속철도 조기착공과 복합소포물 추진 지원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5·18민주유공자법 제정, 신재생에너지 광주계통 통제 결정 저지,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저지, 실효성 없는 군공

항 폐지 등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담아=각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전남지역의 숙원사업을 대선 공약에 담았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등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남 7대 핵심공약을 내놔다.

목포와 순천에 각각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통한 예곡산단 조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제시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 및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순신 벨트’ 유세에서 약속한 광양 제철산업의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전환 적극 지원 등도 담겼다.

또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주민참여 공약형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시범 실시로 전남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와 해남 ‘솔라시도 글로벌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전남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도 국립의대 설립이 담겼다. 의대신설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또 ‘미래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건설과 흑산공항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약속하면서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 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에 포함시켰고, 전남에 신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하기 위해 초광역 선로 구축, 전남 4대 변전소 신설 등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여수, 광양 등 석유화학, 철강 산업 경쟁력 부활시킬 수 있도록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고흥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미래 비행체 산업 연구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또 순천 등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및 국가 생태공원 지정을 통해 순천만권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영광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을 백지화하고,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놔다. ‘탈핵 기본법’ 제정하고 영광 한빛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선관위, 개표소 점검 ‘꼼꼼’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경기도 안양시 덕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소를 찾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리박스쿨 댓글 공작, 명백한 부정선거”

국힘 “근거 없는 정치공세”...민주, 대선 이후 조사 방침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연관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선대위 현장 회의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댓글 조작은 반란행위’라고 했는데, 그 말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며 “2017년 광주에서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을 열었고,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이 순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 사에서 선대위 브리핑을 통해 ‘리박스쿨’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따 만든 단체라는 점과 관련, “(단체의 이름에) 이승만·박정희가 들어가 있으니 극우단체고, 극우단체 사람들과 김 후보가 아니냐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으로 자주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전혀적인 마타도이고, 쏟아지는 악재를 덮기 위한 몰타기”라며 “몰타마시 의혹 제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

의에서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 국정교과서 사태에 버금가는 국가문란이자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KBS 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가) 그분들과 찍은 사진 자체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몇십년 전 일도 아닌데 기억을 못 할 정도도 아니다”며 “김 후보가 아무 상관이 없고, 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근거를 대보라고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 이슈가 아닌 중대한 진상 규명 과제로 보고, 대선 이후에도 조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대선 직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5일부터 개회...선거법·형소법, 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직후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승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민주당은 위하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

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법안 외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